

주간건설 *Review*

505호 2017.9.29(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홈페이지 : <http://www.kfcc.or.kr>, 연 락 처 : 02-771-7936

주 소 : (121-916)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2103

■ 업계 동향

- ▶ 한화건설, 사회복지회관서 추석맞이 나눔 봉사활동
- ▶ 포스코건설, 필리핀서 의료봉사활동
- ▶ 삼성물산, 자매마을 특산품 판매 '직거래 장터' 운영

■ 건설경제 일반동향

- ▶ 재건축 수주전에 해외설계사 유치 경쟁
- ▶ 공공건설시장에서 중견건설사 강세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국토부, 턴키공사 불공정관행 개선 추진
-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 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미통과
- ▶ '판로지원법 시행령 및 중기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개정
-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국토부,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개선 추진
- ▶ DSR·新DTI의 차주소득 정기적 재심사 의무화 방안 검토
- ▶ '해외건설 촉진법 개정안'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17.9.23.(토)~2017.9.29(금)>

제505호 2017.9.29(금)

<업계 동향>

◆ 한화건설, 사회복지회관서 추석맞이 나눔 봉사활동

- 한화건설은 9월26~27일 양일간 서울시 강북구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과 서울시 노원구 쉼터요양원에서 추석맞이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음
- 이번 봉사활동에서 최광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복지관 어르신과 송편을 빚고 삼색전을 부치며 소통의 시간을 가진데 이어, 직접 만든 명절음식을 비롯해 쌀, 식용유 등의 생필품을 담은 추석 선물상자를 다문화, 한부모가정 40여 가구에 배달하며 온정을 나눴음
- 한편, 이번에 봉사활동을 실시한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노원쉼터요양원은 ‘꿈에그린 도서관’을 조성하며 한화건설과 인연을 맺은 바 있음



이웃에게 전달할 송편을 빚고 있는 최광호 사장(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한화건설 봉사단과 복지관 어르신들

◆ 포스코건설, 필리핀서 의료봉사활동

- 포스코건설은 9월19일부터 21일까지 인하대학교 병원, 구세군 자선냄비본부와 함께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북서쪽으로 250km 떨어진 잠발레스 마신록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힘
- 인하대학교 병원 의료진 10명과 자원봉사자 9명으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은 현지 주민 1300명을 대상으로 마신록시 지역 내 마을회관, 산 로렌조 바랑가이 홀(San Lorenzo Brangay hall)에서 무



필리핀 마신록시 산 로렌조 바랑가이 홀에서 현지 주민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봉사진

료로 진료하고 의약품을 지원하였음

- 포스코건설은 2015년부터 마신록시에서 석탄화력발전소 EPC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 시와 맺은 인연으로 지난해 한국 문화와 전통을 알리는 '문화교류축제'를 연데 이어 올해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음
- 한편 포스코건설은 인하대학교 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2011년부터 7차례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인하대학교병원과 협력해 사회공헌 차원의 의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삼성물산, 자매마을 특산품 판매 '직거래 장터' 운영

- 9월25일 삼성물산은 추석을 맞아 각 사업부문별로 자매결연을 맺은 마을과 함께 추석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힘
-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9월14일부터 추석 직거래 장터를 열어 건설·상사·리조트부문의 자매마을 5곳에서 추천한 특산품 14가지를 판매하고 있으며, 판교에 위치한 본사 1층 로비에서 특산물 전시와 시식을 진행 중임
- 또한 지난 6월에는 충북 보은과 강원 홍천의 자매마을을 찾아 농가 일손을 돕고 마을공원 조성활동을 실시하는 등 자매마을에서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으며, 추석을 맞아 사회복지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33개 사내봉사단에게는 회사에서 태안 자매마을의 특산물인 건어물 세트 1600kg을 부식으로 지원하였음
- 삼성물산은 추석 직거래 장터는 자매마을분들에게는 상품 판매량이 늘어서 좋고, 임직원들에게는 믿고 먹을 수 있는 좋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어 모두에 도움이 되는 상생장터라고 설명하였음



자매마을 특산품을 소개하고 있는 삼성물산 임직원들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17.9.23.(토)~2017.9.29(금)>

제505호 2017.9.29(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 재건축 수주전에 해외설계사 유치 경쟁

- 대형건설사들이 서울 강남권 재건축 수주전에서 차별화된 설계를 위해 유명 해외 설계사의 참여가 필수로 여겨지는 추세

<주요내용>

□ 현황

- 올해 재건축 사업장 중 최대어로 꼽힌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의 재건축 수주전에서 해외 유명설계업체의 참여가 확산되고 있음

<재건축 수주전 해외설계사 참여 현황>

사업지	참여업체	해외설계사 참여현황
반포1단지 1·2·4주구 재건축	GS건설	- 미국 시카고 포드햄스파이어, 두바이 라군 빌딩 등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설계한 SMDP가 설계 참여 - 조경·인테리어는 두바이 오페라 하우스와 월트디즈니 월드 포시즌스 리조트등의 조경을 맡았던 EDSA 참여
	현대건설 (9/28 시공권 확보)	- 미국 더블유 할리우드와 더블유 델러스 빅토리호텔 등을 디자인한 HKS가 설계 참여 - 조경·인테리어 부문에서는 일본 도쿄돔시티와 서울 잠실 월드컵타워 설계를 담당했던 CRTKL 참여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GS건설	- 세계적인 해외건축 그룹인 덴마크의 어번에이전시와 파트너십 체결 - 조경부문에서는 SWA와 협력
	롯데건설	- 세계적인 건축가 마크맥을 비롯해 아트디렉터 김백선씨의 설계 참여 - 조경부문에서는 하버드디자인대학원(GSD)과 스폰서십 협약을 체결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대우건설	- SMDP와 함께 특화 설계를 통해 시공권 확보
서초구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대림산업	- 저디 파트너십과 손잡고 시공권 확보
부산 시민공원 축진3구역 재개발	현대산업개발	- SMDP와 협업을 통해 시공권 확보

- 반포1단지 1·2·4주구 재건축 수주전에서는 현대건설과 GS건설이 모두 해외 설계업체와 손잡고 단지 특화 경쟁을 펼쳤고, 두 회사는 설계뿐만 아니라 조경·인테리어 부문에서도 각각 세계적인 회사를 수주전에 참여시켰음
-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수주전에서는 대우건설이, 서초구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수주전에서는 대림산업이 각각 해외 유명 설계업체와 손잡고 각각 시공권을 따내는 데 성공하였음
- 지방의 경우에도 지난 9월16일 부산 지역 최대어로 꼽히는 시민공원 촉진3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한 현대산업개발이 해외 설계업체의 특화 설계를 선보인 현대산업개발이 수주에 성공하면서 유력 사업지에서는 해외 설계사의 참여가 필수로 여겨지는 추세
- 특히,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 우성아파트는 아예 국제제한공개 현상설계공모를 실시해 해외 설계사 참여를 의무화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음

□ 배경 및 전망

- 서울 강남을 비롯해 유력 사업지에서는 건설사마다 조합원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해외 설계사와 손잡고 특화설계를 통한 고급화에 주력하는 것이 대세
- 해외 설계사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면 비용부담이 높아지지만 강남권 등 유력사업지에서는 해외 설계회사의 참여없이 수주전을 치르기 어려운 여건이고, 이런 상황에서 해외 설계사들이 먼저 관심을 가지고 접촉을 하는 사례도 발생
- 다만, 업계 일부에서는 과도한 해외설계사 모시기 경쟁이 국내 설계사의 설 자리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국내 설계사가 기술적으로는 뒤처지지 않는데다, 해외 설계사와의 합작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결국 조합원에게 전가돼 부담이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있음
- 또한 해외 설계사가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부분은 국내 업체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는 이름값을 위해 고비용만 들이는 것이라는 평가도 있음
-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유력 사업지에서는 조합원의 수요에 대한 대응과 수주를 위한 대형사들의 차별화 마케팅 차원에서 해외 설계사와 협력하는 사업지가 더욱 늘어날 전망

◆ 공공건설시장에서 중견건설사 강세

- 9월중 진행된 30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입찰에서 중견건설사들의 강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주요내용>

- 9월에 집행된 기술형입찰, 종심제·종평제 등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수주현황(낙

찰자 선정·통보 기준) 집계 결과, 총 15건에서 14개 건설사가 수주실적을 올린 가운데,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각 1건의 수주에 성공한 가운데 13개 공사에서 중견사들이 수주에 성공

<9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수주 건설사>

건설사	계약방식	공사명	낙찰금액
대우건설	턴키	장보고-Ⅲ 시설사업	2963억4100만원
극동건설	대안입찰	포항 영일만항 북방파제 및 어항방파제 보강공사	1973억4791만8000원
	순수내역입찰	고속국도 제25호선 강진~광주 간 건설공사 제6공구	1156억7130만5291원
코오롱글로벌	턴키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865억7000만원
계룡건설	시공책임형 CM	의정부고산 S3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1644억7200만원
한신공영	시공책임형 CM	화성동탄(2) A4-1BL 아파트 건설공사 14공구	사업관리비 5억5900만원 추정공사비 1133억원
두산건설	종평제	별내선(8호선연장) 2공구 건설공사	1338억32만6702원
화성산업		경산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310억3049만9387원
포스코건설		원남골프장 조성공사	352억523만원
코오롱글로벌		진주정촌 19-9BL 공공주택 건설공사	547억3472만1253원
삼호	종심제	모항항 정비공사	239억6768만원
동우개발		복합편의시설 건립 제1공사	512억1145만5421원
한양		대산항 다목적컨테이너부두 축조공사	242억3645만5173원
쌍용건설		김해울하2 A-1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592억2619만원
KR산업	최저가방식 공공임대리츠	파주운정3 A-12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836억968만원

자료 : 건설경제신문 9/29일자 보도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17.9.23.(토)~2017.9.29(금)>

제 505호 2017.9.29(금)

<건설산업 제도·정책 동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8.2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나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개정안은 10월 중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

<개정안 주요내용>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 등을 5년간 받을 수 없게 됨
 - * 조합원 분양을 받은 경우란 최초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서에 분양대상자로 명시된 경우를 말함
- 한편, 법 시행 이전 소유하고 있던 정비사업 대상 주택에 대해 향후에 조합원 분양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지만, 법 시행 이후 다른 정비사업 주택을 취득하여 조합원 분양을 받거나, 정비사업 일반분양을 신청하여 당첨된 세대에 속하는 경우 종전에 소유하던 주택에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됨
- 동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

□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앞으로는 재건축사업 뿐만 아니라,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터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됨
- 동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전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사업구역에는 적용되지 않음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 수 제한

- 조정대상지역과 과밀억제권역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재건축 조합원은 1주택씩 공급받도록 제한됨
- 동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될 예정

□ 장기소유 및 거주한 1주택자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는 일정기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 경우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
 - *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
- 동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

◆ 국토부, 턴키공사 불공정관행 개선 추진

- 국토교통부는 9월 말까지 턴키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최종확정하고, 10월중 발주기관과, 시공사, 설계사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
- 이는 그동안 턴키 시장에서 발주기관과 시공사가 체결한 불공정계약에 따라 불합리한 관행이 끊이지 않았고, 시공사와 설계사도 갑을 관계로 인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지난 2월 불공정관행 개선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한편, 국토부는 발주기관 불공정관행 개선 TF와 시공사·설계사 불공정관행 개선 TF 등으로 구분하고 발주기관 불공정계약 관행, 시공사와 설계사 간 불공정관행의 사례를 발굴한 이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부는 9월28일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함

<개정안 주요내용>

□ 일괄입찰 등의 설계비 보상은 평가 최종점수를 반영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에 따른 설계보상비 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발주청에 통보하는 설계평가 최종점수(총점 차등 후 설계점수) 반영

□ 일괄입찰 불공정한 계약사례 개선을 위한 입찰안내서 내용 개선

- 계약금액 증액사유 발생시 청구기간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를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 민원 등으로 추가비용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조항 개선
- 설계분야 참가자에 대한 계약내용과 설계보상비 지급 등 적정성을 발주청에서 검토하여 개선요청 할 수 있도록 개선 등

◆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 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미통과

- 9월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 법안(‘17.3.2,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제2소위원회에 회부됨

- 이는 상기 법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과잉 규제’라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데 따른 것으로, 법안이 제2소위로 회부되었다는 것은 이번 회기에는 다루지 않겠다는 것으로 계류될 가능성이 높고, 법안 통과가 미뤄지다 회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있음
- 한편, 상기 법안에 대해 우리협회는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현행대로 유지(12개 항목 공개)해 줄 것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음

<주요내용>

□ 법안(주택법 개정안) 내용

- 공기업이 공급하거나 공공택지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되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택지비 및 건축비 등에 대해 61개 항목별 분양원가를 공개토록 함

◆ ‘판로지원법 시행령 및 중기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개정

-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하고, 오는 12월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개정안 주요내용>

□ (판로지원법 시행령)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공사 범위 조정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공사의 범위를 종합건설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가격이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인 경우로 상향 조정함
-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 구매하여야 하는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을 현행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협의 대상 추가

- “턴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품질수준의 자재구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가 곤란하다고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협의한 경우”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협의 대상으로 추가함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9월26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
- 개정안은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하도급 대금의 예외적 대물 변제 허용 사유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와 관련된 사항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예외적 대물 변제 허용 사유와 관련된 사항은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

<개정안 주요내용>

□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적발력 제고를 위해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의 임직원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

□ 하도급 대금의 예외적 대물 변제 허용 사유 규정

-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예외적 대물 변제 허용 사유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기업 구조 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 채권자 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 관리 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 구체적으로 규정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9월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
- 개정안은 이행 강제금 제도 운영 사항 신설, 반복 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개정안 주요내용>

□ 조사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징수 절차 마련

- 이전에는 자료 제출(보고) 명령 등을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형벌을 부과(7월19일 既 시행)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이행 강제금을 병과(10월19일 시행 예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과 및 징수 절차를 마련함

□ 반복 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사항

- 반복 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여 위반 행위 재발 방지와 법 위반 억지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행) 50%에서 (개정) 100%로 상향 규정

◆ 국토부,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개선 추진

- 9월26일 국토부는 대형 건설사 3곳과 협단체, 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함
- 이 날 회의에서는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총사업비관리지침상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에 대한 불합리한 내용을 발굴하는데 논의의 중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짐
- 현재 총사업비관리지침상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 규정을 살펴보면, 적용시기를 올해 1월1일 이후 입찰공고분으로 제한하고 조정신청도 준공일 전년도 5월말까지 1회로 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 간접비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빼고 조기 준공 때 직·간접 공사비의 감액정산을 의무화하고 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음

- 국토부는 건설사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이 완료되는 대로 총사업비관리 지침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기재부에 개정을 요청하고 2018년부터는 지침 개정안에 맞춰 간접비 지급 항목과 산정 기준 등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 다만,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권을 기재부가 갖고 있는 데다 간접비 지급이 예산과 직결되는 만큼 기재부가 제대로 예산을 반영해 줄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국토부가 마련한 대안이 그대로 제도·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

◆ DSR·新DTI의 차주소득 정기적 재심사 의무화 방안 검토

- 9월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新DTI(총부채상환비율)의 소득산정에 대해 정기적(1~5년 주기)으로 재심사하도록 의무화 방안을 검토 중
- 이는 DSR과 新DTI가 차주의 근로소득에 대한 미래가치를 산정하는 만큼 소득 증가율과 소득 규모가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를 재심사해야 은행 리스크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
- 한편 차주소득의 재심사기간은 은행 자율에 맡겨질 예정이며, 은행들이 차주의 소득현황을 재심사할 때마다 그 정보는 신용정보원에 집적될 전망

◆ ‘해외건설 촉진법 개정안’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 9월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외건설 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됨
- 동 개정안은 국토부 요청으로 지난 6월29일 국회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해외건설산업 정보체계 구축과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기구에 관한 규정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개정안 주요내용>

□ ‘해외공사 지원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근거’ 규정

- 국토부장관은 해외공사의 전략적 지원을 위해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해외공사 관련 현지 정보 및 자료 등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함

□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지원기구 설립 근거 등 신설

- 해외 인프라·도시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지원기구 설립 근거, 지원기구의 소재지·자본금·지원기구의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함